

시선

사설

정쟁보다 유권자를 바라보라

때 아닌 선거가 학내 화두다. 거교적 관심이 모인 총장 선출이 그라하지만 국제캠퍼스(국제캠) 확대운영 위원회(학운위)에서 선거세칙 개정안을 두고 나온 위원들의 몇몇 발언이 우려스럽다.

국제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는 11월 정기 선거 적용을 목표로 선거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화두에 오른 것은 정책설명회 관련 개정안이다. 중선관위는 정책설명회를 주관하고, 이에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겠다는 내용에 일부 학운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립의 포인트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자율성이다. 개정을 주도한 중선관위는 정보제공의 채널이 제한된 학내선거 특성 상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가 토론회 참석 여부를 두고 징계까지 주는 것은 후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에 권리가 개입되는 것이라는 반박이 맞선다.

학내 선거는 사회 선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단선화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은 강의실 방문 같은 대면PR이나 팬플릿 의존도가 높다. 학내 언론의 보도가 더해지지만 주목도는 낮다. 각 후보가 유세를 통해 하고 싶은 말만 던지는 가운데 공약과 후보자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에 정책토론회 '강제' 참석 개정안이 그리 나빠 보이지만은 않는다. 1년 동안 학교생활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단순한 논리이긴 하지만 유권자는 최소한 자신이 남부한 학생회 비가 어떤 후보에 의해 어떻게 쓰일지 적극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 종이 몇 장과 지나가다 본 인상만 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일부 학운위 위원들이 제기한 후보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의도가 있든 학생의 대표가 되고자 손을 들고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이 자신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 후보의 자율성을 우선하라는 말은, 학생을 위 하겠다는 으레 하는 말까지 공수표라는 반증인가. 그 발언이 이미 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출된 학운위 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더욱 개탄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를 두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통해 법제화해뒀다. 유권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해 바른 판단을 돋기 위함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선거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참가는 자율이지만 후보들은 이 소중한 두 세 시간에 사활을 건다.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심지어 '초청대상'이 아닌 군소후보들을 위한 토론회까지 따로 마련한다.

총학생회의 면면이 중선관위를 구성하는 학내 선거의 특성상 특정 선본이나 권력의 개입 우려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정책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학교 유권자들이 이를 좌시할 만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토론회는 제안된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다. 학운위 위원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이를 보기보다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돋는 방안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이공계열 전공기초

'정정기간에 담아라'…불난 집에 부채질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리타임'에서 '이공계 전공기초 정원이 1학년밖에 없어 수강신청에 실패했다'는 불만의 글이 2주 동안 190여 개의 공감을 받았다. 최근 올라온 게시물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이었다. 폭주하는 불만에 행정실은 "정정기간에 담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정정기간에 원하는 수업을 담기는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하염없이 모니터만 바라봤다.

전공기초를 타 학년에 듣는 사유는 많은 학생 수만큼 다양했다. 더 좋은 학점을 끝기 위한 재수 강뿐 아니라 후수과목을 이해하지 못해 돌아온 학생도 있었다.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큰 건 기회 조차 얻지 못한 학생들이었다. 다전공생, 전과생, 편입생 등은 1학년 때 전공기초를 들을 수 없다. 이들은 실제로 전공기초 과목을 듣지 못해 커리큘럼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정기간에 담으라는 행정실의 답이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그 막막함을 해야될 수도 없다.

전공기초 과목은 기초이기에 중요하다. 미분적 분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학수학을 이해할 수 없다. 기초가 없으면 정교함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는 높은 전문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배움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문의 상아탑을 쌓고자 하는 대학에서 기초과목에 학년 제한을 걸어두는 건 후진적으로 보인다.

이 사단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명확한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은 기초과목 수업을 직접 개설하지 않는다. 응용과학대학은 전공기초 수업을 소속 단과대학을 대신해 열어줄 뿐이다. 하나의 단과대학 모든 이공계 학생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고려하기엔 한계가 있다.

책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언젠가 '레드테이프'라는 말을 들었다. 관청에서 공문서를 매는 데 쓰는 붉은 끈에서 유래한, 관료제적 형식주의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정기간에 담으라' 혹은 '교원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등 우리학교의 답변은 '레드테이프'를 떠올리게 했다. 학습권 보장 등의 실질적인 것 보다 형식 논리에 치우치는 모습이었다.

책임 주체가 없다면 책임 의식이라도 가져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빠른 조치는 책임 의식에서 나온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정정기간에 담아라'는 행정실의 응답이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개개인을 같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고 책임지라는 기대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다. 학생과 직원은 같은 소속을 공유한다. 보다 나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교수 성폭력 혐의를 두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해 「인사 규정」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영문과 A교수 성폭력 혐의, 인권대책위 결정내려/중대신문, 2019.3.11.) A교수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소집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징계를 내리는 징계위를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며 "다시는 학내 성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강 모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직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예디대 성추행 강 교수, 교수직 해임 결정 돼/건대신문, 2019.3.7.) 강 모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은 제자 3명을 성추행했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교수는 1월 18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건국대 총학생회 측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사건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인권대책원원회(대책위)가 영어영문학과 A교수 특위)가 지난 4일, 학과 학생들에게 '성폭력·갑

분산되는 관심 속, 중심을 바라봐야 할 때

세시봉

이서림 (기자)



'버닝썬 게이트'가 연일 지면에 오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일이 일파만파 커지며 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임이 드러났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시도와 성매매 알선이 빈번히 일어났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유명 연예인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활동 영상을 돌려봤다. 심지어는 조사 과정 중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기에도 바쁜 와중에 대중의 관심은 문제의 표면에 쏠려있는 모양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그 외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악행이 연일 쏟아진다. 이들의 언행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어느새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이나 약물 사용 등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묵직한 문제는 시야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초집이 어긋나자 불뚱도 엉뚱한 곳으로 뛰었다. 몇몇 네이티즌들은 연예인 채팅방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색어에는 '정준영 동영상'과 함께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언급됐다. 지목을 받은 당사자와 소속사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정작 해명하고 죄값을 치러야 할 가해자는 은퇴를 끝으로 도망가려 하는데 피해자들은 언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는 시선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색출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왜곡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동시에 사건의 본질이 회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면밀히 조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대화 내용에 고위직 경찰이 여려 차례 언급됐고 클럽 '버닝썬'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버닝썬 게이트'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단순 대상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가해자는 의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윤리적인 자각이 없었다. 반면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고 2차 가해의 상처가 심해지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권력과의 유착으로 공고해진 구조는 힘의 차이를 이용해 끊임없이 약자를 양산하고 숨통을 조인다.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꽂아 터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버닝썬 게이트' 이전에도 주악한 모습을 여러 번 경험했다. 최근 재조명 받는 '장자연 리스트' 또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피해자는 착취당하고 죽음으로 몰렸다. 그렇지만 본질을 흐리는 자극적인 기사와 공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수사는 흐지부지 일耽락됐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전에도 경험했던 악행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의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는 동안 자각 없는 가해자들은 또 다시 등장했고 피해자는 늘어만 간다. 분산되는 관심 속에서도 중심을 바라볼 때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대학은 지금

폭력 교수 '솜방망이 치벌'에 뿔난 대학가

김지원 기자 kjkw990327@khu.ac.kr

상습적인 직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제주대 겹지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제주대병원 폭행 교수에 정직 3개월/교수신문, 2019.2.25.) 제주대 송석언 총장은 "겹지교수의 잘못이 무거워 징계가 마땅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과 노조는 대학의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폭력갈질에 대한 응당한 처벌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A교수 특위)가 지난 4일, 학과 학생들에게 '성폭력·갑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웅 | 편집장 이승우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unews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